

빈곤 여성, 소득보장과 안정된 일자리창출 시급

| 글 : 김혜주 객원기자

국회 인권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빈곤 여성가구주 지원사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의 빈곤한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제시하고 여성가구주의 빈곤 원인을 노동시장, 사회보험과 가족영역 등을 예로 들어 상세히 분석·논의하였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빈곤계층에 대한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제도, 근로소득지원제도와 국민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빈곤여성가구주를 위한 대한 정책지원과제를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빈곤의 여성화란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의 문제로 되어가는 것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용어로서 정의한 것이다. 이는 최초로 빈곤에 대한 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사회정책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빈곤가구 중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여성가구주(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빈곤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2000)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 남성가구주 가구 빈곤가구 비율은 7.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동시에 여성가구주의 빈곤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위기의 절정이었던 1998년과 그 이후 회복과정에서 보여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간의 빈곤율 전개 양상에 차별성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급작스런 경제위기로 실업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가 비교적 빠르게 제자리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다수가 빈곤층에 계속 머물게 되는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관찰된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탈빈곤의 수단을 가지지 못하여, 한번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빈곤계층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갖게된다.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운영팀장은 “남성중심의 노동시장, 가족정책,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근거,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사회체제하에서 사회적 배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빈곤여성가구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을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여성빈곤, 더 나아가 빈곤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빈곤 여성가구주의 정책 지원과제로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노동시장에의 참여지원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보장 △사회적 관계망의 복원, 사회적 자본의 회복 △민주주의의 정치적 참여 (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를 통한 여성의 힘 증진 등이 제시되었다. 또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③ 긴급지원제도의 활성화 ④ 근로소득지원세제 ⑤ 사회연대은행 등 마이크로 크레딧 등이 제시되었다.

김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여성가구주의 대책으로 여성가구주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국가의 공공부조성 부조와 혜택에 집중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한 안정적 직업을 갖기 위한 소득보장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 김안나 연구원은 “여성가장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좀 더 많은 빈곤여성들이 직업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며 “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훈련수당의 현실화는 직업훈련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